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 의 자 : 용혜인 · 김 윤 · 서왕진
김남희 · 서미화 · 박정현
이광희 · 오세희 · 정혜경
이연희 · 손 솔 · 전종덕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최근 가정폭력,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,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, 가해자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반 시 제재수단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.

이에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의5 신설).
- 나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,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검사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의2제6호).
- 라.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,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 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함(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78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”를 “강도범죄, 스토킹범죄 및 친밀관계폭력범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5. “친밀관계폭력범죄”란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7호의 죄를 말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사는”을 각각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및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5항까지의 규정”을 각각 “제6항까지”로 한다.

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1.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

2.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
3. 친밀관계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 인정된 때

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정한다) 또는 스토킹범죄”를 “한정한다)과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스토킹범죄를”을 “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”로 한다.

제2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21조의4제2항 중 “한정한다) 또는 스토킹범죄”를 “한정한다)과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”로 한다.

제21조의8 중 “제5조제6항·제8항”을 “제5조제7항·제9항”으로 한다.

제5장의2의 제목 “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”을 “스토킹행위자 및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6제1항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잠정조치와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”로, ““잠정조치””를 ““피해자 보호조치””로, “스토킹행위자의 사건”을 “스토킹행위자 및 친밀관계폭력행위자(이하 이 장에서 “행위자”라 한다)의 사건”으로, “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”를 “행위자의 주거지”로

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, “스토킹 행위자”를 “행위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토킹 행위자가”를 “행위자가”로, “제3호의2에 따른 스톱킹행위자의 잠정조치”를 “제3호의2와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위자의 피해자 보호조치”로 한다.

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토킹 행위자”를 “행위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, “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”를 “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, “제9조제4항”을 “제9조제4항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스토킹 행위자”를 “행위자”로, “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4호”를 “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 한다.

제31조의7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잠정조치”를 각각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 한다.

제31조의8의 제목 “(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·사용·폐기 등)”을 “(행위자의 수신자료의 보존·사용·폐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스토킹 행위자의”를 “행위자의”로, “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”를 “행위자의 수신자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토킹 행위자”를 “행위자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스토킹범죄 혐의”를 “스토킹범죄 혐의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친밀관계폭력범죄 혐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잠정조치 이행”을 “잠정조치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”를 “제11조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혐의”를 “혐의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토킹 행위자”를 “행위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, “스토킹범죄사건”을 “스토킹범죄사건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사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잠정조치”를 “피해자 보호조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특정범죄”란 성폭력범죄,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, 살인범죄, <u>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</u> 를 말한다. 2. ~ 3의4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 ① <u>검사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부착명령”이라 한다)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⑤ <u>검사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 <u>강도범죄, 스토킹범죄 및 친밀관계폭력범죄</u> ----- -----. 2. ~ 3의4. (현행과 같음) 3의5. “ <u>친밀관계폭력범죄</u> ”란 「 <u>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</u> 」 제2조제7호의 죄를 말한다. 4. (현행과 같음) 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 ① <u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</u> --

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작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작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1.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

2.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
3. 친밀관계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 인정된 때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작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.

⑦ (생략)

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작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9조의2(준수사항) ① (생략)

② 삭제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(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)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작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⑦ ----- 제6항까지-----

-----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⑨ ----- 제6항까지-----

-----.

제9조의2(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한정한다)과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<u>스토킹범죄를</u> 저지른 사람: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보호관찰명령”이라 한다)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제21조의4(준수사항) ① (생략)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(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) 또는 <u>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</u>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	2. <u>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 폭력범죄</u> ----- ----- 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 제21조의4(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정한다)과 스톱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</u>----- -----
--	---

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
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
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8(준용규정) 보호관찰대
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·
제8항, 제6조부터 제8조까지,
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, 제
9조의2, 제10조부터 제12조까
지,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
지,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
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,
“부착명령”은 “보호관찰명령”
으로, “부착기간”은 “보호관찰
기간”으로, “피부착명령청구자”
는 “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”로,
“피부착자”는 “보호관찰대상
자”로, “전자장치 부착”은 “보
호관찰”로 본다.

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
전자장치 부착

제31조의6(전자장치 부착의 집
행) ① 법원은 「스토킹범죄의
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
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
치(이하 이 장에서 “잠정조치”

-----.

제21조의8(준용규정) -----
-----제5조제7항 ·
제9항 -----

-----.

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 및
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
전자장치 부착

제31조의6(전자장치 부착의 집
행) ① -----

----- 잠정조치와
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

라 한다)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(이하 이 장에서 “관할경찰관서”라 한다)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(이하 이 장에서 “보호관찰소”라 한다)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

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,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

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

--- “피해자 보호조치”--- 스토킹행위자 및 친밀관계폭력행위자(이하 이 장에서 “행위자”라 한다)의 사건 -----
행위자의 주거지-----

---.

② 피해자 보호조치 -----
-- 행위자-----

③ ----- 행위자가

----- 제3호의2와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

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잠정조치 기간 중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잠정조치 기간 중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법」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위자의 피해자 보호조치 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행위자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피해자 보호조치 -----
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제3호-----

3. 피해자 보호조치 -----

---- 제9조제4항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4항-----

4.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·변경·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

4. ----- 피해자 보호조치-----

⑤ -----

행위자-----

----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제8호-----

-----.

⑥ ----- 피해자 보호조치 -----

--.

⑦ ----- 피해자 보호조치-----

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
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
통지하여야 한다.

⑧ (생 략)

제31조의7(전자장치 부착의 종
료)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
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
이 종료된다.

1.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
때
2.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
된 때
3.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
때

제31조의8(스토킹 행위자 수신자
료의 보존·사용·폐기 등) ①
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
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
한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로
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
하여 그 자료(이하 “스토킹 행
위자 수신자료”라 한다)를 보
존하여야 한다.

② 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는
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31조의7(전자장치 부착의 종
료) -----

-----.

1. 피해자 보호조치-----
--
2. 피해자 보호조치-----

3. 피해자 보호조치-----
--

제31조의8(행위자의 수신자료의
보존·사용·폐기 등) ① ----

-- 행위자의 -----

-----행위자의 수신
자료 -----
-----.

② 행위자의 -----

람·조회·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. 1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스토킹범죄 혐의</u>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<u>잠정조치 이행</u>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<u>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연장·변경·취소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</u>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1	----- --. 1. ----- ----- -- <u>스토킹범죄 혐의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친밀관계 폭력범죄 혐의</u>----- 2. ----- ----- ----- <u>잠정조치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</u>--- 3. ----- ----- <u>제11조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</u>---- 4. ----- -----
--	---

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<u>협의</u>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	----- -----<u>협의 또는 「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</u>----- 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<u>스토킹행위자</u>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 <u>행위자</u> ----- -----.
1. <u>잠정조치</u>가 효력을 상실한 때	1. <u>피해자 보호조치</u>----- --
2. <u>잠정조치</u>의 원인이 되는 <u>스토킹범죄사건</u>에 대해 법원의 무죄, 면소,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	2. <u>피해자 보호조치</u>----- <u>스토킹범죄사건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사건</u>----- ----- --
3. <u>잠정조치</u>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	3. <u>피해자 보호조치</u> ----- -----